

주간 통일정세

2016-35

Contents

I. 북한정세

1. 정치
2. 경제
3. 사회문화
4. 외교국방

II. 동북아정세

1. 한반도 정세
2. 주변국 정세

III. 북한인권

1. 북한인권 국제동향
2. 북한인권 내부동향
3. 북한인권 남한동향
4. 탈북자 및 이산가족·납북자·국군포로
5. 대북지원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외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I 북한정세

■ 개요

분류	일자	내용
정치	8.27	北신문, 청년들의 부르주아 사상문화 침투 막아야(연합뉴스)
	8.28	北리수용, 남아공서 집권당 부총비서 면담(연합뉴스)
		北노동신문, 해군절 맞아 'SLBM 발사 성공' 선전(연합뉴스)
	8.29	北, 청년단체 명칭 20년만에 변경... "김일성-김정일주의 청년동맹"(연합뉴스)
	8.30	정부 당국자, 北 '내각상 처형설'에 "확인 필요한 사인"(연합뉴스)
		北, 사드배치 빌미로 대남 적개심 선동...주민결속 의도(연합뉴스)
		北청년동맹 선전문구 '총폭탄' → 핵폭탄...핵보유국 과시 의도(연합뉴스)
	8.31	北 김정은, 청년동맹 대회 참가자들과 기념사진(연합뉴스)
		北, 김용진 부총리 처형·김영철 통전부장 혁명화 조치(연합뉴스)
		北 김정은, 태영호 망명 이후 빨치산 2세 검열(연합뉴스)
9.1	北, 평양공항에 정비단지 조성...전투기 정비도(연합뉴스)	
9.2	北, 원산에 금융청사·특급호텔 건립 추진(연합뉴스)	
경제	8.29	中 연변주 통한 북중교역, 대북제재 회피경로 자리잡아(연합뉴스)
	8.31	안보리 제재 예외에도 하산·나진항 석탄반출 감소(연합뉴스)
		中 허룽시·북한, 백두산 '무봉특구' 관광 인프라 본격 확충(연합뉴스)
9.1	中, 자국내 北은행지점 폐쇄...양골라, 北과 상업거래 중단(연합뉴스)	
사회 문화	8.29	중국 거주 북한 주민들, 당국 지시 제대로 안 따라(연합뉴스)
	9.2	北서 텃밭 노린 군인도둑 기승...농민들 움막 짓고 지켜(연합뉴스)
외교 국방	8.27	안보리, 北 잇단 탄도미사일 발사 규탄성명...중대조치 취할것(연합뉴스)
		美 전문가 "北, SLBM 실전배치에 2년은 더 걸려"(연합뉴스)
	8.28	北, 안보리 규탄 성명에 반발...사변적 행동조치 보여줄 것(연합뉴스)
	8.29	조선신보, 사드배치 결정으로 북중-북러관계 급진전(연합뉴스)
		중국, '北 SLBM 규탄' 성명관련 "유관국, 정세긴장 행위 말아야"(연합뉴스)
		카자흐 '비핵화 국제회의' 개최...지속적인 北 핵실험 개탄(연합뉴스)
		국방부, 北 SLBM 1~3년내 전력화 가능...美 본토까지 위협(연합뉴스)
	8.30	이나다 日 방위상, 내달 첫 방미...北中 현안 논의(연합뉴스)
유엔 군축회의의 참가국들 北 SLBM 발사 집중 성토(연합뉴스)		
	우크라이나, 北과 교류협정 파기 10월 시행...입국 때 비자 받아야(연합뉴스)	

8.31	러셀 美차관보 “북한문제, 동아시아정상회의의 시급한 의제”(연합뉴스)
	美북한 SLBM 등 탐지·요격 쉽게 우주에 탐지 센서 설치 검토(연합뉴스)
	주유엔 일본대사, 탄도미사일 잇단 발사 北에 추가제재 요구(연합뉴스)
	북한, 철길 이용한 이동식 미사일발사 차량 제작중(연합뉴스)
9.1	北, 3천급 이상 잠수함 2척 건조중…한척은 핵잠수함(연합뉴스)
	동아시아정상회의 성명에 ‘北 SLBM 도발 우려’ 담길 듯(연합뉴스)
9.2	대북제재 보고서 53개국 제출…1/4은 北 우호국(연합뉴스)
	北외무성 “美 제재 지속하면 비참한 결과 초래할 것”(연합뉴스)
	北 외화별이 기관 상하이 대표, 경찰 폭행해 中서 추방(연합뉴스)
	中, 무인기 동원해 홍수로 고립된 北주민들 구조(연합뉴스)
	日정부, 지자체 상대 ‘조선학교 보조금’ 재검토 실태조사(연합뉴스)
	北매체, 대북제재 좌담회 열고 “자강력만 강화” 주장(연합뉴스)
	美전문가 “北SLBM, 中JL-1과 꼭 닮아…같은 것이거나 변종”(연합뉴스)
北, 완성전 SLBM 실전매치 선언 가능…문천 해군기지 개보수(연합뉴스)	

■ 주간 동향

1. 정치

가. 김정은 동향

2016. 8. 31.

■ 北 김정은, 청년동맹 대회 참가자들과 기념사진(연합뉴스)

-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제9차 대회 참가자들과 기념 사진을 찍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1일 보도함.
- 최룡해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김수길 평양시 당위원장, 김능오 평안북도 당위원장, 박태성 평안남도 당위원장, 리일환 당 중앙위 부장, 전용남 청년동맹 중앙위 제1비서, 김용주 재일본조선청년동맹대표단장, 김영녀 재중조선인청년연합회대표단장이 이 자리에 함께했다고 중앙통신은 밝힘.
- 김 위원장은 “전체 대회 참가자들이 우리 당의 후비대, 척후대, 익측부대로서의 사명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해나가리라 확신한다”고 말했으며, 청년동맹 9차 대회 기간 생일을 맞은 참가자들에게 생일상을 차렷했다고 통신은 전함.

나. 주요 엘리트 및 간부 동향

2016. 8. 28.

■ 北리수용, 남아공서 집권당 부총비서 면담(연합뉴스)

- 아프리카를 순방 중인 리수용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26일 남아프리카공화국 집권당인 아프리카민족회의(ANC) 제씨에 두아르테 부총비서와 면담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28일 보도함.
- 두아르테 부총비서는 이 자리에서 “두 당 사이의 관계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면서 “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남아프리카인민의 투쟁을 적극 성원해준 조선인민을 언제나 잊지 않고 나라의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조선노동당의 투쟁을 전적으로 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중앙방송은 전함.
- 리온 모셜리 ANC 국제부 부부장과 김창렬 남아공 주재 북한 대사가 비행장에서 리 부위원장이 이끄는 대표단을 전송함.

2016. 8. 30.

■ **정부 당국자, 北 ‘내각상 처형설’에 “확인 필요한 사안”(연합뉴스)**

-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농업과 교육정책을 각각 담당해온 내각상(장관) 2명을 ‘불경과 반혁명’ 등의 죄목으로 공개 처형했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정부 당국자는 30일 ‘확인된 바 없다’거나 ‘확인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밝힘.
- 일부 언론은 이날 대북소식통을 인용해 지난 4년간 내각의 농업문제를 책임져온 ‘황민’이라는 인물과 ‘이영진’으로 알려진 북한 교육상이 이달 초 공개 처형됐다고 보도함.
- 정부 당국자는 황민 처형 보도에 대해서는 “확인된 바 없다”면서 사실이 아닐 것이라는 반응을 보임. 또 ‘이영진 교육상’ 처형설에 대해선 “북한에는 그런 직책과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없다”면서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설명함.

2016. 8. 31.

■ **北, 김용진 부총리 처형·김영철 통전부장 혁명화 조치(연합뉴스)**

- 북한의 김용진 내각 부총리가 지난달 처형됐고, 김영철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이 지난달 중순부터 한달 가량 혁명화 교육을 받았다고 통일부가 밝힘.
-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31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 내부의 공개 처형설에 대해 “정부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확인된 사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며 “먼저 내각 부총리 김용진이 처형을 당했고, 당 통전부장 김영철도 혁명화 조치를 받았다”고 밝힘. 정 대변인은 “그리고 당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 최희도 현재 혁명화 조치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함.
- 정부 관계자는 “63세인 김용진은 6·29 최고인민회의의 단상 밑에 앉아있었는데 김용진은 자세 불량을 지적받은 것이 발단됐다고 한다”며 “보위부 조사를 받았는데 그 결과 반당 반혁명분자 그리고 현대판 종파 분자로 낙인찍혀서 7월 중에 총살 집행됐다”고 설명함.

■ **北 김정은, 태영호 망명 이후 빨치산 2세 검열(연합뉴스)**

- 북한 당국이 최근 한국으로 망명한 주영(駐英) 북한 대사관 태영호 공사의 부인이 김일성의 빨치산 동료 오백룡의 일가로 알려지면서 빨치산 2세들에 대한 대대적인 검열에 나섰다. 주장이 제기됨.
- 탈북자 단체인 NK지식인연대 김홍광 대표는 3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내외신 기자초청 북한 실상 설명회에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어제의 충신이 저절로 오늘의 충신이 되는 법은 없다”고 말했다면서 이같이 주장함.
- 한편 태극 주재 북한 대사관 과학 참사를 지낸 홍순경 북한민주화위원회 명예이사장은 “북한 독재정권이 북한 외교관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보고 생활 편의를 보장해주지 않고 있기 때문

에 그들이 동요하고 있다”고 주장함. 그는 “북한이 세습체제와 폐쇄정책을 포기하고 개방으로 나가지 않는 한 엘리트층의 탈북과 망명은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말함.

다. 공식행사

2016. 8. 29.

■ 北, 청년단체 명칭 20년만에 변경…“김일성-김정일주의 청년동맹”(연합뉴스)

- 북한 최대의 청년 근로 단체인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의 명칭이 ‘김일성-김정일주의 청년동맹’으로 20년 만에 바뀌었음.
- 29일 조선중앙통신은 “28일 채택된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제9차 대회 결정서에 의하면 대회는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의 명칭을 ‘김일성-김정일주의청년동맹’으로 명명한다는 것을 선포하였다”며 “결정서는 전원 찬성으로 채택됐다”고 보도함. 결정서는 “청년동맹과 우리 청년들이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 기치 높이 주체혁명 위업의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투쟁에서 당의 믿음직한 후비대, 척후대, 익측부대로서의 사명과 임무를 다해나갈 것을 바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의도가 담겨져 있다”고 강조함.
- 청년동맹은 만 14세부터 30세까지의 청년 학생층이 의무 가입하는 북한 최대의 청년 근로 단체이자 사회단체로, 약 500만 명이 활동 중임.
- 대회에는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비롯해 황병서 인민군 총정치국장, 최룡해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김기남 당 중앙위 부위원장 등이 참석함.

라. 주요 기관 행위

2016. 9. 1.

■ 北, 평양공항에 정비단지 조성…전투기 정비도(연합뉴스)

- 북한이 평양국제공항에 고려항공 여객기를 정비하는 대규모 단지를 조성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일 보도함.
- 미국 존스홉킨스대학 국제대학원(SAIS) 산하 한미연구소의 커티스 멜빈 연구원은 RFA에 출연, 지난 5월 10일 촬영한 위성사진을 공개하면서 이같이 밝힘.
- 멜빈 연구원은 “평양국제공항의 두 개 활주로 가운데 남쪽에 있는 활주로에서 서쪽으로 1km 떨어진 곳에 고려항공 여객기를 정비하는 대형 정비단지가 새로 만들어졌다”면서 “위성사진에서 확인한 고려항공 정비시설에 수백만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자본

이 들어갔을 것”이라고 주장함.

- 멜빈 연구원은 “이는 북한이 관광산업을 위한 항공시설에 투자함은 물론 공군 예산이 늘어나면서 공군 소속인 고려항공도 혜택을 받았을 것”이라며 정비시설이 전투기 정비에도 활용될 것”이라고 분석함.

2016. 9. 2.

■ **北, 원산에 금융청사-특급호텔 건립 추진(연합뉴스)**

- 북한이 경제특구인 ‘원산-금강산 국제관광지대’ 개발을 위해 원산에 금융종합청사와 5성급 호텔 건설 등을 추진함.
- 북한의 대외선전용 사이트 ‘내나라’는 2일 공개한 ‘원산시 중동 토지종합개발’ 투자제안서에서 개발 대상 지역은 “원산시의 상업, 관광, 문화 교류의 중심지이자 무역 및 금융거래 중심지로 개발된다”고 밝힘.
- 사업 대상지는 강원도 원산시의 중심부인 중동과 상동 일부 지역으로 총 부지 면적은 30만km², 총 투자 비용은 미화 1억9천656만 달러(한화 2천200억여원)라고 제안서는 설명함.
- 그러나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받는 상황에서 북한의 뜻대로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임.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당장 국제사회 제재를 받는 상황에 계획이 성공적으로 이행될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힘.

마. 주요 구호 및 논조

2016. 8. 27.

■ **北신문, 청년들의 부르주아 사상문화 침투 막아야(연합뉴스)**

- 북한은 23년 만에 개최 중인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청년동맹) 제9차 대회를 맞아 청년들에 대한 부르주아 사상문화 침투를 철저히 차단하는 한편 ‘청년중시’ 사상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힘.
-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7일 ‘민족의 흥망과 인류의 미래는 청년들에게 달려 있다’라는 제목의 논설을 통해 “우리 당은 앞으로도 인민 중시, 군대 중시와 함께 청년중시를 확고한 전략으로, 제일 가는 무기로 틀어쥐고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매진할 것”이라고 보도함.
- 무엇보다 먼저 청년들에 대한 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해 부르주아 사상문화의 침투를 막아야 한다고 신문은 역설함.

2016. 8. 28.

■ **北노동신문, 해군절 맞아 'SLBM 발사 성공' 선전(연합뉴스)**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8일 해군절을 맞아 최근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발사시험 성공을 대대적으로 선전함.
- 신문은 이날 '백승의 위력 떨치는 무적의 강군이 있어 조국의 바다는 금성철벽'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인공지구위성을 쏘아올린 것에 못지않은 또 하나의 경이적인 성과인 공격형잠수함에서의 탄도탄수중발사의 성공으로 오늘 우리의 해군무력은 자기 발전의 새로운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주장함.
- 신문은 “무진막강한 군력을 천백배로 다진 우리 조국의 신성한 영해, 영토와 영공을 감히 넘보는 원수가 있다면 그가 누구이든 무자비한 불벼락을 피하지 못한다”며 위협하기도 함.

2016. 8. 30.

■ **北, 사드배치 빌미로 대남 적개심 선동...주민결속 의도(연합뉴스)**

- 북한이 지난 6월부터 한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를 비난하는 내부선전 활동을 전개하면서 대남 적대감을 높이고 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소식통들의 말을 인용해 30일 보도함.
- 함경북도의 한 소식통은 RFA에 “지난 6월부터 최근까지 각종 강연회에서 한국의 사드배치 결정에 대해 온갖 막말을 동원해 비난하고 있다”며 “(사드배치가) 핵전쟁을 일으키려는 노골적인 행위라고 주민들에게 강조하고 있다”고 말함.
- RFA는 “북한은 지난 수십 년간 주민결속이 필요할 때마다 긴장된 정세를 빌미로 당원과 근로자들을 반(反) 제국주의 계급교양에 몰아넣었다”며 “북한이 한국의 사드배치 결정을 빌미로 내부적으로 긴장된 정세를 조성해 주민결속을 다지려는 의도”라고 설명함.

■ **北청년동맹 선전문구 '총폭탄'→'핵폭탄'...핵보유국 과시 의도(연합뉴스)**

- 북한이 23년 만에 개최한 청년동맹 대회에서 선전 문구를 기존 '총폭탄이 되리라'에서 '핵폭탄이 되리라'로 바꾼 것으로 30일 확인됨.
- 북한 조선중앙TV 앵커는 지난 29일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제9차 대회 횡발야회 녹화방송에서 “선군조선의 태양이시며 영원한 승리의 기치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를 결사옹위하리라. 태양을 옹위하여 500만 핵폭탄이 되리라.”라고 말함.
- 청년동맹은 만 14세부터 30세까지의 청년 학생층이 의무 가입하는 북한 최대의

청년 근로·사회단체로, 약 500만 명이 활동 중임.

2. 경제

가. 정책 동향

- 특이사항 없음

나. 주요조치

- 특이사항 없음

다. 경제 상황

- 특이사항 없음

라. 대외 경제 관계

2016. 8. 29.

■ 中 연변주 통한 북중교역, 대북제재 회피경로 자리잡아(연합뉴스)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가 반년째 계속되면서 두만강 일대 중국 연변조선족 자치주를 통한 북중교역이 기존 랴오닝(遼寧)성 단둥(丹東) 루트를 대신하는 무역경로로 자리 잡음.
- 29일 북중접경 무역사정에 밝은 복수(複數)의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연변자치주 훈춘(琿春)시의 취안허(圈河) 통상구를 거쳐 중국과 북한을 오가는 대형 화물차와 컨테이너 트럭이 하루 수백대로 증가함.
- 중국 동북지방과 북한의 주요 무역통로인 취안허 통상구는 지난 3월 초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시행 이후 하루 통행량이 수십대로 크게 줄었으나 소리소문없이 예전 통행량을 회복한 것임.

2016. 8. 31.

■ 안보리 제재 예외에도 하산-나진항 석탄반출 감소(연합뉴스)

- 러시아 하산과 북한 나진항간 철도를 통한 러시아산 석탄 반출량이 올해 들어 감소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31일 보도함.

- RFA는 러시아의 한 경제지를 인용해 “올해 상반기 나진-하산 철도를 통한 물동량은 63만9천 t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8% 감소했다”면서 “나진-하산 구간 전체 화물 운송량 가운데 러시아산 석탄 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97.9%로, 러시아산 석탄 수출 감소가 운송량 감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밝힘.
- RFA는 “러시아가 지난 3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270호 채택 당시 러시아산 석탄의 나진항 반출에 대한 예외조항까지 뒤흔으며 애쓴 결과치고는 초라한 실적”이라고 평가함.

■ 中 허룽시·북한, 백두산 ‘무봉특구’ 관광 인프라 본격 확충(연합뉴스)

- 중국 지린(吉林)성 연변조선족자치주의 허룽(和龍)시가 북한과 손잡고 백두산 ‘무봉국제관광특구’(이하 무봉특구)의 관광 인프라 확충에 나섬.
- 31일 지린성 여유(관광)국 등에 따르면 허룽시는 관할 충산(崇善)진에서 북한으로 이어지는 관광코스를 활성화한다는 구상 아래 통관수속을 간소화하고 무봉특구 내 온천, 호텔, 승마장 등 관광시설도 확충하기로 함.
- 허룽시 관계자는 중앙정부가 허룽시를 국가급변경경제합작구로 공식 승인한 만큼 향후 무봉특구 개발 등 각종 방안을 이용해 동북아의 관광·물류 산업 중심지로 도약할 계획이라고 밝힘.

2016. 9. 1.

■ 中, 자국내 北은행지점 폐쇄…양골라, 北과 상업거래 중단(연합뉴스)

-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2270호에 따라 중국이 자국내 북한은행의 지점을 폐쇄하고 양골라는 북한과의 모든 상업적 거래를 중단한 것으로 전해짐.
- 외교부 당국자는 안보리 결의 2270호 채택 6개월을 하루 앞둔 1일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전함.
- 이 당국자에 따르면 북한을 편의치적(便宜置籍) 선박을 자국이 아닌 제3국에 등록하는 방식 상 가국으로 하고 인공기를 달고 다니던 요르단의 해운업체가 우리 정부의 요청에 따라 편의치적을 취소한 것으로 전해짐. 요르단 외에도 다른 4개국도 비슷한 조치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짐.

3. 사회문화

가. 공식 발언 및 주요조치

■ 특이사항 없음

나. 시장관련

■ 특이사항 없음

다. 각종 단속 및 검열

■ 특이사항 없음

라. 사회 동향

2016. 8. 29.

■ 중국 거주 북한 주민들, 당국 지시 제대로 안 따라(연합뉴스)

- 중국에 거주하는 북한 국적자(조교·朝僑)들이 최근 군사적 도발을 감행하고 무리한 요구를 남발하는 북한 당국의 지시를 제대로 따르지 않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9일 보도함.
- 중국 지린(吉林) 성 연벤(延邊) 조선족자치주 소식통은 RFA에 “최근 조교들에 대한 북한 당국의 통제력이 크게 약화된 것으로 보인다”며 “조교들에게 주는 혜택은 별로 없는 반면 그들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다 보니 조교들이 (북한) 당국의 지시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고 밝힘.
- 중국 산둥(山東) 성 조선족 소식통은 “요즘 조교들 사이에 북한 정권에 대한 반감이 높아지고 있다”며 “조국의 방침이라면 북한 당국의 지시에 무조건 따르던 예전의 태도와 달리 행사나 모임 장소에서 북한에 대한 불만을 숨기지 않는다”고 말함.
- 조교는 북한에서 중국으로 합법적 절차를 거쳐 건너왔지만, 중국 국적 취득을 거부한 북한 주민들을 가리키며 현재 3천~4천여 명인 것으로 알려짐.

2016. 9. 2.

■ 북서 텃밭 노린 군인도둑 기승…농민들 움막 짓고 지켜(연합뉴스)

- 북한에서 최근 추수를 앞두고 곡물을 노린 군인 범죄가 기승하자 농민들이 움막을 짓고 생활하며 텃밭을 지키고 있다고 북한 전문매체 데일리NK가 2일 보도함.
- 평안남도 소식통은 이 매체에 “최근 군인들이 밤에는 물론 대낮에도 농민들의 개인 텃밭에 침입해 곡물을 싹쓸이하고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해 농민들은 텃밭 주변에 움막을 짓고 경비를 서고 있다”고 전함.
- 이 매체는 지난 6월에도 “북한 당국에서 군인들의 식생활 문제를 제대로 보장해

주지 않자 군인들이 인민들의 재산을 털어내 자기들의 배를 채우려 하고 있다”면서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조직한 규찰대가 활발한 활동을 통해 사건 예방에 나서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음.

4. 외교국방

가. 북·미 관계

2016. 8. 31.

■ 러셀 美차관보 “북한문제, 동아시아정상회의의 시급한 의제”(연합뉴스)

- 다음 달 7일부터 이틀간 라오스에서 열릴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서 북한 문제가 비중 있게 다뤄질 것이라고 대니얼 러셀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담당 차관보가 밝힘.
- 러셀 차관보는 30일(현지시간) 워싱턴DC 외신기자클럽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EAS에 참석하는 “지도자들이 북한 문제와 (핵무기) 비확신 문제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예상함.
- 지난 24일 북한이 SLBM을 발사했을 때 미국 국무부와 국방부는 이를 “도발”로 규정하며 강력히 규탄했고, 미 국무부는 북한에 대해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언행을 자제하고 대신 국제사회의 의무와 약속을 이행하는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음.

■ 美, 북한 SLBM 등 탐지·요격 쉽게 우주에 탐지 센서 설치 검토(연합뉴스)

- 미국이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이나 중국 등의 극초음속 미사일에 대응해 지금보다 훨씬 빠르게 탐지해 요격할 수 있도록 우주에 센서를 설치하는 방안 검토 작업에 나섬.
- 디펜스 윈 스페이스 뉴스 등 미언론은 북한 잠수함이 기습 발사한 SLBM 등이 알래스카에 배치되는 최신형 장거리식별레이더(LRDR) 탐지 망을 벗어나는 상황에 대비해 우주 중계도에 미사일 탐지 센서를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30일(현지시간) 보도함.
- 앞서 로리 로빈슨 미 북부사령관 겸 북미우주항공사령관(공군 대장)도 상원 군사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북한은 단기적으로 이란보다 더 중요한 위협을 주고 있다”며 “지금 당장은 중거리 탄도미사일이 위협이지만 북한은 ICBM을 이용해 미국 본토를 타격하려고 애를 쓰고 있다”고 평가함.

2016. 9. 2.

■ **北외무성 “美, 제재 지속하면 비참한 결과 초래할 것”(연합뉴스)**

- 북한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에 따른 추가제재 가능성을 미국이 제기한 데 대해 대북제재를 지속한다면 비참한 결과를 보게 될 것이라고 위협함.
-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2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와 문답을 통해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부보좌관이라는 자가 전략잠수함 탄도탄 수중 시험발사를 비롯한 우리의 정정당당한 핵억제력 강화조치를 걸고 들면서 더 많은 압력을 가할 필요가 있다고 력설했다”며 “미국이 구태의연한 자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제재’ 나발을 계속 불어대면서 경거망동한다면 그 후과(결과)는 더욱 더 비참해질 것”이라고 주장함.
- 앞서 조시 어니스트 미국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달 24일 북한의 SLBM 발사 이후 브리핑을 통해 “북한 정권의 도발적이고 불안을 조성하는 행동들에 대해 계속해서 우려하고 있다”며 추가제재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음.

나. 북·중 관계

2016. 8. 29.

■ **조선신보, 사드배치 결정으로 북중·북러관계 급진전(연합뉴스)**

-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인 조선신보가 29일 주한미군의 한반도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결정을 계기로 북한의 대중·대러 관계가 급진전되고 있다고 보도함.
- 조선신보는 이날 ‘메아리’ 코너에 실은 ‘역사적(역사적) 전환점’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조선반도(한반도)를 둘러싼 정치력학(역학)과 구도에서 역사적인 반전이 일어나고 있다”면서 “중, 로(러)는 미국이 주도하는 유엔 안보리를 무대로 한 대조선(대북) 압박 높음에 일정한 거리를 두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고 밝힘.
- 또 대러 관계에 대해 “반미 로선(노선)을 취하고 있는 로씨야(러시아)는 조선의 SLBM(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발사 성공을 오히려 찬양한다”면서 “조·로(러) 관계가 전면적으로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주장함.

■ **중국, ‘北 SLBM 규탄’ 성명관련 “유관국, 정세긴장 행위 말아야”(연합뉴스)**

- 중국 정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지난 26일 북한의 최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는 언론성명을 채택한 것과 관련, 유관 당사국을 향해 “정세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하지 말 것”을 촉구함.
-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9일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대해 “북한

의 미사일 발사 문제에 대해 안보리에는 명확한 규정이 있다”면서 “우리는 유관 당사국이 냉정과 절제를 유지하고 서로를 자극하거나 정세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일을 하지 않기를 원한다”고 밝힘.

- 앞서 유엔 안보리는 지난 26일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거듭되는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는 언론성명을 채택했으며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도 성명 채택에 동의한 바 있음.

2016. 8. 30.

■ 이나다 日 방위상, 내달 첫 방미…北中 현안 논의(연합뉴스)

- 이나다 도모미(稻田朋美) 일본 방위상이 취임 후 처음으로 내달 13일께 미국을 방문,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과 회담할 예정이라고 일본 언론이 30일 보도함.
- 보도에 따르면 이나다 방위상은 탄도미사일 발사를 반복하는 북한 정세와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 인근 해역 진입 등으로 해상진출을 강화하는 중국 동향 등에 대해 카터 장관과 논의할 방침임.
- 이나다 방위상은 미일이 10월 실시할 대규모 연합훈련(‘Keen Sword’)과 11월 예정된 미일 공동 지휘소 훈련(일명 야마 시쿠라)에서 안보법에 따른 자위대의 새 임무를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도쿄신문은 전함.

2016. 9. 2.

■ 北 외화벌이 기관 상하이 대표, 경찰 폭행해 중서 추방(연합뉴스)

-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통치자금을 관리하는 노동당 39호실 산하의 핵심 외화 벌이기관인 대성무역의 중국 상하이(上海) 주재 대표가 지난해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체포돼 지난달 사실상 추방처분을 받았다고 일본 도쿄신문이 북중 소식통을 인용해 2일 보도함.
- 도쿄신문은 “대성무역 상하이 주재 대표는 노동당 간부의 친족인 50대 초반 남성”이라며 “중국 측에 의해 사실상 국외 추방처분을 받았다”고 보도함. 중국 측은 북중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해 더 엄격한 처분을 내리지 않는 것으로 전함.
- 신문은 북한은 이 남성의 지위를 고려해 사태를 중시, 베이징(北京) 대사관 간부뿐 아니라 당국에서도 비밀경찰인 국가안전보위부 담당자를 파견해 중국 공안당국에 재차 선처를 구했다고 보도함.

■ **中, 무인기 동원해 홍수로 고립된 北주민들 구조(연합뉴스)**

- 중국이 북한에 구조대를 파견, 홍수로 고립된 북한 주민 3명을 구조했다고 중국 관영 언론이 보도함.
- 2일 중국중앙(CC)TV 등에 따르면 중국 지린(吉林)성 당국은 지난달 31일 북한의 구조 요청을 받고 함경북도 온성군 두만강 온성도로 구조대원 10명과 구조선 2척을 급파함.
- 이번 호우로 두만강 투먼시와 접경한 북한 온성군 남양은 시가지 일부가 물에 잠기고 단층집이 지붕만 남긴 채 완전히 침수되는 등 큰 피해를 입었고 연변 훈춘(琿春)시와 인접한 함경북도 나선시 경제특구에도 호우가 내려 가옥 수백 채가 파손되고 수천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짐.

다. 북·일 관계

2016. 8. 31.

■ **주유엔 일본대사, 탄도미사일 잇단 발사 北에 추가제재 요구(연합뉴스)**

- 북한의 최근 잇단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유엔이 추가 대북제재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음.
- 뱃쇼 고로(別所浩郎) 유엔 주재 일본대사는 30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일본은 대북제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고 AFP통신이 전함.
- 뱃쇼 대사는 올해 초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해 채택된 안보리 결의 2270호를 거론하고 “2270호를 엄격하게 이행하면서, 동시에 제재와 관련해서 우리가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함. 이어 “그래야 북한에 대해 이런 식으로는 계속 가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면서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 행동하는데 유엔 안전 보장이사회(안보리)가 하나가 돼야 한다”고 말함.

2016. 9. 2.

■ **日정부, 지자체 상대 ‘조선학교 보조금’ 재검토 실태조사(연합뉴스)**

- 일본 정부가 지난 3월 조선학교에 운영 보조금을 지급해 온 도도부현(광역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이를 재검토하라고 지시한 데 이어 최근에는 재검토 상황을 조사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일각에서는 정부가 재검토 지시를 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재검토 상황을 조사하는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사실상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 중단 압력이 아니냐

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초·중·고교 과정을 운영하는 조선학교는 현재 68개교가 있으며 학생수는 6천여명인 것으로 문부과학성은 파악하고 있음.

라. 북·러 관계

■ 특이사항 없음

마. 북·기타국가 관계(국제기구 포함)

2016. 8. 27.

■ 안보리, 北 잇단 탄도미사일 발사 규탄성명…중대조치 취할것(연합뉴스)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26일(현지시간)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거듭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는 언론성명을 채택함.
- 안보리는 북한의 24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를 포함해 7~8월 실시된 4건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적시하면서 “안보리 회원국들은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힘.
- 그러나 7월부터는 이례적으로 이런 대응이 뒤따르지 않았고, 외교가에서는 사드배치에 반대하는 중국 때문에 성명 채택이 순탄치 않다는 관측이 제기됨.

2016. 8. 28.

■ 北, 안보리 규탄 성명에 반발…사변적 행동조치 보여줄 것(연합뉴스)

- 북한은 28일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언론성명에 대해 반발하고 나섬.
-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서 전략잠수함 탄도탄수중시험발사를 비롯한 우리의 자위적 핵억제력 강화조치들을 결코드는 공보문을 발표하는 엄중한 적대행위를 또다시 감행하였다”고 주장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앞서 유엔 안보리는 26일(현지시간)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거듭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는 언론성명을 채택함. 안보리는 성명에서 “상황을 면밀하게 주시해 나가면서, 추가적인 중대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힘.

2016. 8. 29.

■ 카자흐 '비핵화 국제회의' 개최...지속적인 北 핵실험 개탄(연합뉴스)

- 카자흐스탄 수도 아스타나에서 29일(현지시간) 열린 '핵 없는 세상 만들기' 국제회의에서 북한의 지속적인 핵실험을 개탄하는 내용이 포함된 '아스타나 비전'이 발표됨.
- 이번 회의는 카자흐스탄이 구소련 최대 핵실험장이었던 자국 동북부 '세미팔라틴스크' 실험장 폐쇄 25주년과 유엔 '핵실험 반대의 날'을 맞아 주최했다.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과 홍용표 통일부 장관, 라시나 제르보 포괄적핵실험금지 기구(CTBTO) 사무총장 등을 비롯한 40여 개국 정부 관계자와 국제기구, 비정부단체(NGO) 등이 회의에 참석함.
- 홍 장관은 회의 참석 이후 30일에는 카자흐스탄 알마티를 방문해 현지 우리 동포들을 대상으로 정부의 통일정책을 설명할 예정임.

2016. 8. 30.

■ 유엔 군축회의 참가국들 北 SLBM 발사 집중 성토(연합뉴스)

- 30일(현지시간) 오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군축회의 전원회의에서 참가국들이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를 집중적으로 성토함.
- 미국, 일본뿐 아니라 유럽, 중남미 국가들까지 한목소리로 북한의 SLBM 시험 발사를 규탄하고 핵 포기를 촉구함.
- 올해 마지막 회기인 제네바 군축회의 의장은 주제네바 대표부 김인철 차석대사가 맡고 있음. 다음 전원회의는 내달 6일 열림.

■ 우크라이나, 北과 교류협정 파기 10월 시행...입국 때 비자 받아야(연합뉴스)

- 옛 소련국가 우크라이나가 북한과 맺은 민간교류협정을 폐기하기로 한 결정이 오는 10월부터 본격 시행될 것으로 알려짐.
- 우크라이나 정부는 지난달 27일 볼로디미르 그로이스만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소련 시절인 지난 1986년 북한과 체결한 민간교류협정을 파기하기로 결정함.
- 우크라이나는 지난해 교역규모 기준으로 중국, 러시아, 인도, 태국에 이은 북한의 5번째 교역 상대국이었음.

2016. 9. 1.

■ 동아시아정상회의 성명에 '北 SLBM 도발 우려' 담길 듯(연합뉴스)

- 오는 7~8일 라오스에서 열리는 동아시아정상회의(EAS)의 결과를 담은 의장성명에 북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 발사(8월 24일)를 규탄하거나 우려하는 내용을 넣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음.
- 외교 소식통은 1일 “EAS 결과물로서 도출될 의장성명에 SLBM 시험발사 등 북한 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강도 높은 메시지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며 “현재 북한 핵문제에 대해 입장이 비슷한 나라들을 중심으로 사전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함.
- 다른 소식통은 “EAS에서 여러 정상들이 북한 핵·미사일 문제와 관련해 발언을 할 것이며 정상들의 발언이 의장성명에 반영될 것”이라며 “7월 EAS 외교장관회의에서 나온 문안이 참고가 될 것”이라고 말함.

■ 대북제재 보고서 53개국 제출…1/4은 北 우호국(연합뉴스)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북한의 제4차 핵실험 등에 대한 조치로 지난 3월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 2270호의 이행보고서를 제출한 나라가 8월 말 기준 총 53개국으로 집계됐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일 보도함.
- 유엔주재 한국대표부 관계자는 VOA에 이행보고서 제출국 현황을 전하면서 “대북제재 결의 2270호가 강력하고 새로운 조치들이 많이 포함된 만큼 회원국들이 앞으로도 충실히 이행해 북한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힘.
-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2006년 10월 제재 결의 1718호를 비롯해 총 4개의 대북제재 결의에 대한 이행보고서를 접수해 옴.

2016. 9. 2.

■ 北매체, 대북제재 좌담회 열고 “자강력만 강화” 주장(연합뉴스)

- 북한은 2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6개월을 맞아 ‘좌담회’를 열고 제재가 ‘자강력’을 강화시켰다는 주장을 펼침.
- 북한의 대외 선전매체 ‘조선의 오늘’은 이날 “미국과 추종세력들이 공화국의 자위적 조치와 평화적 우주활동을 걸고 들면서 대조선 ‘제재결의’를 조작한 때로부터 반년이 라는 시간이 흘렀다”면서 “이와 관련해 편집국 논설원이 내각사무국 부국장 최호영, 사회과학원 경제연구소 실장 김웅호와 좌담회를 가졌다”고 밝힘.
-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지난 3월 2일 대북제재 결의 2270호를 채택함. 최근까지 50여 개 국가가 제재 이행보고서를 제출하는 등 국제사회의 전방위적 압박이 이뤄지는 가운데 북한 당국은 제재 무용론을 거듭 내세우고 있음.

바. 군사 및 핵·미사일

2016. 8. 27.

■ 美 전문가 “北, SLBM 실전배치에 2년은 더 걸려”(연합뉴스)

- 북한이 최근 발사한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이 기술면에서 진일보했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초기작전능력을 확보하기까지 2년은 더 걸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 미국 항공우주연구기관 에어로스페이스의 존 실링 연구원은 26일(이하 현지시간) 북한 전문매체 ‘38노스’ 기고문에서 “최근 북한의 SLBM 시험 성공은 원래 예상보다 더 빨리 기술 진전이 이뤄졌음을 보여주지만 그렇다고 당장 다음 주, 다음 달, 심지어 내년(실전에 배치할) 준비가 됐다는 뜻은 아니다”고 말함.
- 북한은 당시 SLBM을 정상보다 높은 각도로 발사했는데 정상각도였다면 사거리가 1천km 이상일 것으로 추정돼 성공적인 발사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2016. 8. 29.

■ 국방부, 北 SLBM 1~3년내 전력화 가능…美 본토까지 위협(연합뉴스)

- 국방부는 29일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이 1~3년 안에 전력화될 수 있고 한반도를 넘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함.
- 국방부는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보고 자료에서 “향후 북한은 SLBM 실전배치를 위해 진력할 것”이라며 “신뢰도 검증을 위한 추가 발사, 잠수함 작전능력 점검 등 전력화까지 1~3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힘.
- 앞서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핵추진 잠수함 도입론에 대해 “현 상황에 대한 우려 속에서 나온 말로 이해한다”며 “현재 핵추진 잠수함 문제에 대해선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고 밝힘.

2016. 8. 31.

■ 북한, 철길 이용한 이동식 미사일발사 차량 제작중(연합뉴스)

- 북한이 철길을 이용한 이동식 장거리 미사일발사대를 제작하고 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소식통들을 인용해 31일 보도함.
- 강원도에 사는 한 북한 주민은 RFA에 “지난 5월부터 6월4일차량공장(6월4일차량종합기업소)에 제2경제위원회 기술자들이 내려와 이동이 가능한 미사일발사대를 만들고 있다”면서

“이 공장은 북한이 군사무기 현대화 계획을 선포한 2014년부터 내각 철도성에서 제2경제위원회(군수산업) 산하로 넘어갔다”고 전함.

- 다만, 북한의 낮은 철길과 불안정한 노반, 작전지역까지 끌고 갈 견인기관차의 부재 등 화물열차식 이동발사대는 전략적인 측면에서 효과가 떨어진다고 소식통들은 주장함.

■ 北, 3천t급 이상 잠수함 2척 건조중…한척은 핵잠수함(연합뉴스)

- 북한이 3천t급 이상의 잠수함 2척의 건조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하나는 핵잠수함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 탈북자 단체인 NK지식인연대(대표 김홍광)는 3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내외신 기자 초청 북한 실상 설명회에서 “전략잠수함 설계에서 북한은 두 가지 프로젝트를 동시에 가동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함.
- 북한은 새로 건조하게 될 2대의 전략잠수함의 작전기지건설도 병행하고 있다고 NK지식인연대는 덧붙였다.

2016. 9. 2.

■ 美전문가 “北SLBM, 中JL-1과 꼭 닮아…같은 것이거나 변종”(연합뉴스)

- 미국의 북한 전문가인 브루스 벡톨은 1일(현지시간) 북한이 최근 발사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북극성’(KN-11)의 제원과 관련, “중국의 JL-1 SLBM이거나 아니면 이것의 변종일 수 있다”고 주장함.
- 미 텍사스 주(州) 안젤로주립대 교수인 벡톨은 이날 라디오 ‘존 뱃첼러 쇼’ 인터뷰에서 “이번에 발사된 북한 SLBM은 중국 JL-1 SLBM의 ‘판박이’(carbon copy)”라면서 이같이 말함.
- 북한은 앞서 지난달 24일 함경남도 신포 인근 해상에서 ‘북극성’(KN-11)으로 추정되는 SLBM을 발사함. 이 미사일은 480km(300마일)를 날아가 일본 방공식별구역(JADIZ)에 떨어짐.

■ 北, 완성전 SLBM 실전배치 선언 가능…문천 해군기지 개보수(연합뉴스)

- 북한이 잠수함탄도미사일(SLBM)이나 SLBM 장착용 잠수함을 실전에 투입할 수 있는 수준까지 완전히 개발하지 못했더라도 선전 효과 등을 노려 '실전배치'를 선언할 가능성이 있다고 미국의 북한 문제 전문가들이 예상함.
- 북한전문매체 ‘38노스’ 운영자 조엘 위트는 1일(이하 현지시간) 전화간담회에서 “북한은 2019년보다 이른 시점에 ‘우리는 실전 가능한 잠수함을 갖고 있고 미사일을

사용할 준비가 돼 있으며 잠수함이 배치됐다'고 주장할 수 있다"며 "비록 실제로 전투력을 갖지 않았더라도 북한은 그에 따른 정치적 충격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함.

- 커티스 멜빈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SAIS) 연구원과 버뮤데스 연구원은 북한이 최근 강원도 원산에 인접한 문천 해군기지에서 선박 접안시설과 부속 건물은 물론 주거용으로 보이는 건물들까지도 대대적으로 재정비하는 모습을 최근 촬영된 위성사진들을 통해 관찰할 수 있었다고 밝힘.

II 동북아정세

1. 한반도정세

■ 개요

분류	일자	한국	미국
한미 관계	8.28	한미, 북한 수역 '수중정보' 공유한다...대잠작전 강화(연합뉴스)	
	8.30		美전문가 "北 SLBM 지상배치도 가능... 韓 사드포대 2개 필요"(연합뉴스)
	8.31		백악관 "오바마,朴대통령 만나게 되면 강력한 방위지원 재확인"(연합뉴스)
			G20 정상회의 무슨 논의 오갈까...한중미 회동 주목(연합뉴스)
	9.1		토콜라 KEI 부소장 "中, 한국내 사드 北 때문임을 인식해야"(연합뉴스)
	9.2		브룩스 사령관,美 전략사령관 면담...한 반도 미사일방어 논의(연합뉴스)
분류	일자	한국	중국
한중 관계	8.27	'사드 여파' 이낙연 전남지사 중국 방문 이틀 앞두고 연기(연합뉴스)	
	8.28		中, G20 성공위해 北규탄 동참...사드비 관 재료될 문장 반영(연합뉴스)
	8.29		中 일부 네티즌 사드 옹호...모기 잡을때 도 총력전 펴는데(연합뉴스)
	8.31	외교차관 오늘 전격 방중...한중정상회담 최종조율(연합뉴스)	중국 외교부, 한국과 G20 일정 논의 중 (연합뉴스)
			中 양자택일 강요 전략으로 사드 압박... 주변국에 '심리적 협박'(연합뉴스)
			中 G20 성공개최에 총력 쏟느라...사드 등 한반도문제 '로우키'(연합뉴스)
	9.1		자칭귀 베이징대 교수, 사드 배치 근원은 북한 핵 개발(연합뉴스)
678456789중국, G20 한중 정상회담 확 정...관련 시안 논의중(연합뉴스)			

	9.2		中, 한중 정상회담 앞두고 '사드 배치 반대 재확인'(연합뉴스)
분류	일자	한국	일본
한일 관계	8.28		日언론 "관계개선이 통화스와프로...한국, 체면보다 내실 선택"(연합뉴스)
분류	일자	한국	러시아
한러 관계	9.1		러 극동장관 나진하산 프로젝트 여전히 한국에 열려 있어(연합뉴스)

2. 주변국정세

■ 개요

분류	일자	미국	중국
미중 관계	8.30	미·중 정상, G20회의 전날 양자회담 북핵논의...사드도 거론될 듯(연합뉴스)	필리핀, 남중국해 대립에서 화해로...‘노릇한’ 中, ‘에티는’ 美(연합뉴스)
	8.31	케리, 인도와 ‘찰떡공조’ 과시...中남중국해 영유권 야욕 ‘경계’(연합뉴스) 美전문가, 9월 미중 정상회담서 북한의제 주목 될 받을 것(연합뉴스)	
분류	일자	미국	일본
미일 관계	8.28	미일 외교장관, 北규탄 안보리성명 환영...한미일 연대 대응(연합뉴스)	
	8.31	오바마·아베, 내달 아세안회의 때 3개월만에 또 회담...中견제(연합뉴스)	
분류	일자	미국	러시아
미러 관계	8.27	미·러 “시리아 해결책 입장차 좁혀”...휴전까지는 아직(연합뉴스)	
	8.29	미·러 시리아 알레포 연합 공습작전 논의 중(연합뉴스)	
분류	일자	중국	일본
중일 관계	8.30	中日, G20 때 정상회담 조정 난항...센카쿠열도 갈등이 결림될(연합뉴스)	
분류	일자	중국	러시아
중러 관계	8.30	러시아, 中·러 해군 합동훈련에 구축함 전단 파견(연합뉴스)	
분류	일자	일본	러시아
일러 관계	8.31	日·러 경제협력박차...러 국영전력사에 3천700억원 첫 투자(연합뉴스)	
	9.1	日, 북방영토 반환시 ‘러시아인 거주권 인정’ 방안 마련(연합뉴스)	

■ 주간 동향

1. 한반도정세

가. 한·미 관계

2016. 8. 28.

■ 한미, 북한 수역 '수중정보' 공유한다..대잠작전 강화(연합뉴스)

- 한국과 미국 군 당국이 북한의 잠수함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북측 수역의 수중환경 정보를 상호 분석해 공유하기로 함.
- 평시 북한 잠수함을 추적하고, 유사시 이를 차단, 격침하는 대잠수함 작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임.
- 군의 한 관계자는 28일 “지난 6월 열린 제2차 한미 대잠수함전협력위원회에서 한반도 작전 수역의 해양 및 수중환경 정보를 분석하고 공유하는 방안을 논의했다”면서 “이는 양국의 대잠작전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밝힘.

2016. 8. 30.

■美전문가 “北 SLBM 지상배치도 가능..韓 사드포대 2개 필요”(연합뉴스)

- 북한에서 개발 중인 잠수함탄도미사일(SLBM)을 차량에 장착해 이동식 탄도미사일 로도 쓸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한국에 더 큰 골칫거리가 될 수 있다는 미국 전문가의 지적이 나옴.
- 미국 제임스마틴 비확산센터(CNS)의 제프리 루이스 동아시아담당국장은 29일(현지시간)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KN-11’로 불리는 북한 SLBM의 원형인 러시아의 ‘SS-N-6’ 미사일이 북한에서 이미 ‘무수단’미사일로 개량된 점을 지목하며 이같이 밝힘.
- 루이스 국장은 그러나 “무기 경쟁만 지속된다면 오히려 각자의 손을 더 강하게 묶는 셈이 될 것이며, 따라서 아무리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북한이 더 이상의 (핵 또는 미사일) 능력을 갖추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찾는 게 최선”이라며 미사일방어무기 확충과 더불어 외교적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견해를 보임.

2016. 8. 31.

■ 백악관 “오바마, 차대통령 만나게 되면 강력한 방위지원 재확인”(연합뉴스)

- 미국 백악관은 30일(현지시간) 중국 항저우에서 다음 달 4~5일 진행되는 주요 20개국(G20)

- 정상회의 기간 한미 양자회담 개최 가능성에 대해 "현재로서는 이는 바가 없다"고 밝힘.
-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과 공식적인 양자회담을 할지 여부는 알지 못한다”면서 이같이 말함.
 - 어니스트 대변인은 이어 “오바마 대통령이 (G20과 같은) 이런 회의 기간을 활용해 일부 카운터파트와 만날 기회를 갖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이라면서 “현시점에서 그런 것이 계획 돼 있는지 어떤지 잘 모르지만, 만약 양자회담이 열리게 된다면 오바마 대통령은 우리의 동맹, 한국에 대한 미국의 강력한 방위지원을 표명하는 기회로 활용할 것”이라고 말함.

■ G20 정상회의 무슨 논의 오갈까...한·중·미 회동 주목(연합뉴스)

- 내달 4~5일 중국 항저우(杭州)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는 글로벌 경기 회복을 위해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세계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게 가장 큰 목적임.
- 세계 제2 경제 대국인 중국은 압도적인 경제력을 바탕으로 한 리더십으로 이번 G20 회의에서 다양한 행동 계획을 채택해 존재감을 과시할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이보다 더 큰 관심을 끄는 대목은 한반도 사드(고고도 방어 체계) 배치와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 등 중국, 한국, 일본, 미국 등을 둘러싼 첨예한 현안이 산적해 과연 G20 양자 회동을 통해 접점을 찾을 수 있는지임.

2016. 9. 1.

■ 토클라 KEI 부소장 “中, 한국내 사드 北때문임을 인식해야”(연합뉴스)

- 한반도의 긴장 발생 원인은 한국의 방어무기체계 때문이 아닌 북한의 공격무기 때문임을 중국이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미국 한미경제연구소(KEI)의 마크 토클라 부소장이 지적함.
- 31일(현지시간) 토클라 부소장은 KEI 홈페이지 기고를 통해 한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 결정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한국이 북한으로부터의 방어라는 고유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음”을 중국 측에서 인정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함.
- 미국 국무부에서 38년간 근무한 토클라 부소장은 주한 미국 부대사를 역임하는 등 한미관계에도 정통하다고 알려져 있음.

2016. 9. 2.

■ 브룩스 사령관, 美 전략사령관 면담...한반도 미사일방어 논의(연합뉴스)

-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사령관이 미국의 핵무기와 미사일방어체계 운용을 담당하는

- 세실 헤이니 미 전략사령관을 만나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억제 방안을 논의함.
- 주한미군사령부는 2일 페이스북을 통해 “브룩스 사령관이 지난 1일 미국 워싱턴D.C.에서 헤이니 사령관과 면담했다”고 밝힘.
 - 주한미군은 “이번 면담을 통해 미 전략사령부와 주한미군사령부는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고 대한민국을 방어하며 한반도 안정을 보장하는 협조체계를 강화하게 됐다”고 강조함.

나. 한·중 관계

2016. 8. 27.

■ ‘사드 여파’ 이낙연 전남지사 중국 방문 이틀 앞두고 연기(연합뉴스)

-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 여파로 이낙연 전남지사의 방중 일정이 무기한 연기됨. 전남도는 오는 29일부터 31일까지로 예정했던 중국 쓰촨성(四川省)과 충칭(重慶)시 방문 일정을 무기한 연기한다고 27일 밝힘.
- 이 지사는 “한국의 사드 배치 같은 국가 차원의 현안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지만 그럼에도 전남도가 겪은 일련의 과정은 몹시 유감스럽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방문이 서로에게 의미 있는 성과를 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함.
- 그러나 전남도는 오는 30일과 31일 이틀간 쓰촨성 청두(成都)에서 열릴 예정인 에너지밸리 투자설명회와 관광설명회는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힘.

2016. 8. 28.

■ 中, G20 성공위해 北규탄 동참…사드비판 재료될 문장 반영(연합뉴스)

- 중국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성명에 동의한 것에는 머지않아 자국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의 성공을 염두에 둔 선택이라고 일본 언론은 분석하고 있음.
- 마이니치(毎日)신문은 중국이 다음 달 4~5일 중국 항저우(杭州)에서 열리는 G20 회의의 성공을 위해 “중국 대(對) 한미일”보다는 협력 관계를 부각하려 했다고 28일 보도함.
- 안보리는 북한이 24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를 포함해 4차례에 걸쳐 탄도미사일을 쏜 것을 규탄하는 성명을 미국 뉴욕 현지시간 26일 발표해 “추가적인 중대조치”를 하겠다고 천명함.

2016. 8. 29.

■ **中 일부 네티즌 사드 옹호…모기 잡을때도 총력전 펴는데(연합뉴스)**

- 중국 정부가 한반도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반대하는 가운데 일부 중국 네티즌이 한국의 상황을 옹호하는 댓글을 올려 눈길을 끌고 있음.
- 물론 중국 내 여론은 사드 배치 반대가 다수를 이루고 있으나 최근 북한이 잠수함발사탄 도미사일(SLBM) 시험 발사 등 연쇄 도발을 하는 것에 불만 섞인 반응도 나오고 있음.
- 베이징 소식통은 “자세히 말할 순 없지만 외교 경로를 통해 지속해서 중국 정부에 한국의 사드 배치 당위론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고 있다”면서 “아직 중국의 입장에 변함이 없지만 언젠가 우리의 순수한 뜻이 통할 날이 있으리라고 본다”고 말함.

2016. 8. 31.

■ **외교차관 오늘 전격 방중…한중정상회담 최종조율(연합뉴스)**

- 임성남 외교부 1차관이 31일 중국을 전격 방문, 9월 4~5일 중국 항저우(杭州)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한중 양자 정상회담 개최를 최종 조율함.
- 외교부는 임 차관이 9월 1일까지 이틀간의 방중 기간 류전민(劉延濤) 중국 외교부 부부장과 협의한다고 31일 발표함.
- G20 정상회의 개막을 나흘 앞둔 시점에 한중 외교 당국의 고위 인사가 만나는 만큼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국가 주석 간의 정상회담은 성사될 것으로 보임.

■ **중국 외교부, 한국과 G20 일정 논의 중(연합뉴스)**

- 중국 정부가 내달 4~5일 항저우(杭州)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한중 정상회담을 논의 중임을 간접적으로 내비침.
-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31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날 임성남 외교부 제1차관이 전격 방중한 것과 관련해 G20 한중 정상회담에 대한 중국 측 입장을 묻는 연합뉴스의 기자 질문에 “임 차관이 중국 측과 G20 회의 기간에 관련된 일에 대해 의사 교환을 하고 있다”면서 “중국은 주최국으로서 각 회원국 지도자들을 매우 우호적으로 접대할 것”이라고 말함.
- 화 대변인은 “이번 G20 기간에 양자 회담과 교류 또한 매우 정상적인 것”이라면서 “우리는 현재 관련 일정에 따라 한국 측을 포함한 각 회원국과 긴밀한 소통을 하면서 조정과 안배를 하고 있다”고 말함.

■ **中 양자택일 강요 전략으로 사드 압박...주변국에 '심리적 협박'(연합뉴스)**

- 중국이 거대 시장이라는 경제적 혜택을 내세워 주변국들에 '양자택일'을 강요하고 있으며 이러한 전략으로 한국과 싱가포르, 호주 등 지역국들이 잘못된 딜레마에 처해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31일 지적함.
- 유럽에서 노골적인 군사력을 앞세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러시아와는 달리 이미 세계 수준의 막강한 군사력을 배경으로 거대 시장의 경제력을 내세워 주변국을 압박하는 중국의 전략을 WSJ은 싱가포르 외교관의 말을 인용해 '수동적 공세 외교'로 지칭함.
- 주변국들에 안보와 번영 사이에서 택일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새로운 동아시아 번영을 위한 선택들은 봉쇄하는 것이며 지역이 중국을 필요로 하는 만큼 중국도 지역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 WSJ은 강조함.

■ **中 G20 성공개최에 총력 쏟느라...사드 등 한반도문제 '로우키'(연합뉴스)**

- 중국이 내달 4~5일 항저우(杭州)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뜨거운 감자'인 한반도 문제에 로우키를 유지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음.
-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의 리더십과 중국의 존재감을 과시하려는 중국으로선 한반도 사드(고고도 방어 체계) 배치나 북핵 문제 등 지역 현안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경우 G20 회의의 성과가 가려질 수 있어 부담스럽기 때문으로 보임.
- 베이징 소식통은 "문제는 G20 회의가 끝난 뒤"라면서 "이번 G20 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시 주석이 만나 좋은 결과를 내면 양국 관계의 긴장이 줄어들 수 있겠지만 별 소득이 없다면 올해 하반기는 더욱 힘들어질 것"이라고 우려함.

■ **자칭귀 베이징대 교수, 사드 배치 근원은 북한 핵 개발(연합뉴스)**

- 중국 정부에 외교 정책을 조언하는 저명한 중국인 학자가 한반도 사드(고고도 방어 체계) 배치가 북한의 핵무기 개발 때문이라며 한국의 입장을 옹호해 눈길을 끌고 있음. 특히 중국이 그동안 북한에 대해 너무 우호적인 태도를 견지해왔다면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까지 펼침.
- 31일 신량망(新浪網)사나닷컴에 따르면 자칭귀(賈慶國) 베이징(北京)대 국제관계학원 원장이 최근 신량망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북한 문제에 대해 일부 잘못된 인식을 하고 있다면서 이 같은 견해를 피력함.
- 자칭귀 교수는 "한국의 사드 배치 문제는 미국과 한국에서 나왔지만, 근원은 북한에 있는데 만약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고집하지 않는다면 미국도 한국에 사드를 배치할 이유가 없을 것이고 한국도 동의하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요컨대 북한의 계속된 핵무기 개발 때문에 미국은 구실로 삼을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지적함.

2016. 9. 1.

■ **중국, G20 한중 정상회담 확정…관련 사안 논의중(연합뉴스)**

- 중국 외교부가 오는 4~5일 항저우(杭州)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기간에 한중 정상회담이 열린다고 공식 확인함.
- 이에 따라 현재까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과 양자 회담이 확정된 국가는 한국, 미국, 러시아 등 3개국임.
-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일 청와대에서 G20 한중 정상회담을 발표한 것에 대한 중국 측 입장을 묻는 연합뉴스 기자의 질문에 “청와대에서 발표한 것처럼 한중 정상회담이 열리며 현재 관련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긴밀하게 협조하면서 진행하고 있다”고 밝힘.

2016. 9. 2.

■ **中, 한중 정상회담 앞두고 ‘사드 배치 반대’ 재확인(연합뉴스)**

- 항저우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한중 정상회담을 앞둔 중국이 한반도 사드(고고도 방어 체계) 배치에 대한 반대 입장을 재확인함.
- 이는 이번 G20 회의차 방중하는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 간의 양자 회동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이견을 좁히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임.
-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일 정례 브리핑에서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 측 입장을 묻자 “미국이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는 사안에 대해 우리는 중국의 전략 균형과 안보 이익을 훼손할 것이라고 여기고 있으며 우리는 중국의 국가 안전 및 전략 이익이 확실히 존중받기를 바란다”고 밝힘.

다. 한·일 관계

2016. 8. 28.

■ **日언론 “관계개선이 통화스와프로…한국, 체면보다 내실 선택”(연합뉴스)**

- 한국·일본 정부가 통화스와프 협정 재개를 논의하기로 한 것에 대해 일본 언론은 양국 관계개선의 흐름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을 28일 내놓음.
- 아사히(朝日)신문은 “한국 경제가 지금 바로 통화스와프를 재개해야 하는 상황은 아니다”며 양국 관계의 최대 현안이었던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합의 후

- 약 8개월이 지나면서 “관계개선이 경제 분야로 확대했다”고 보도함.
- 유일호 한국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아소 다로(麻生太郎)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은 작년 2월 중단됐던 양국 간 통화 스와프 계약 재체결을 목표로 논의를 시작하자고 27일 서울에서 열린 재무장관 회담에서 합의함.

라. 한·러 관계

2016. 9. 1.

■ 러 극동장관, 나진-하산 프로젝트 여전히 한국에 열려 있어(연합뉴스)

- 러시아와 남북한 간 복합물류 사업으로 추진됐던 ‘나진-하산 프로젝트’가 여전히 한국에 열려 있다고 알렉산드르 갈루슈카 러시아 극동개발부 장관이 1일(현지시간) 밝힘.
- 갈루슈카 장관은 극동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 개막을 하루 앞둔 이 날 현지에서 한 언론 인터뷰에서 “현재 나진-하산 프로젝트는 북한과 러시아 간 양자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설명함.
- 러시아는 이 사업에 한국을 끌어들이며 남북러 3각 협력 사업으로 확대하는 데 공을 들여왔고, 한국도 참여를 긍정적으로 검토하면서 시범 운송까지 추진했으나 올해 초 북한의 4차 핵실험 후 대북 제재를 강화하면서 나진-하산 사업 참여 중단을 결정함.

2. 주변국정세

가. 미·중 관계

2016. 8. 30.

■ 미·중 정상, G20회의 전날 양자회담 북핵논의…사드도 거론될듯(연합뉴스)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는 9월 3일 중국에서 만나 한반도 문제를 비롯한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벤 로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부보좌관이 밝힘.
- 로즈 부보좌관은 29일(현지시간) 백악관 정례브리핑에 참석해 오바마 대통령이 “중국 시간으로 오는 3일 토요일 오후와 저녁에 중국에서 시진핑(중국) 국가주석과 양자 회담 일정을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함.
- 로즈 부보좌관은 대화를 통한 북한 핵문제 해결과 관련해 “대화에 대해 열려 있지만, 북한이 비핵화에 대해 진지함을 보이는 경우에만 그렇다”며 북한에 “분명히 더 많은 압력이 가해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함.

■ **필리핀, 남중국해 대립에서 화해로…‘느긋한’ 中, ‘애티는’ 美(연합뉴스)**

- 필리핀이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을 놓고 중국과의 대립 구도에서 화해 모드로 전환하면서 미국과 중국 두 강대국의 처지가 뒤바뀌었음.
- 미국이 그동안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패권 확장을 저지하기 위해 일본, 필리핀 등과 구축한 ‘반중국 대오’에 균열이 감지됨. 필리핀의 마약 용의자 즉결처형을 둘러싸고 ‘인권 갈등’까지 불거져 미국과 필리핀 사이가 예전 같지 않음.
- 페르펙토 아사이 필리핀 외무장관은 최근 로이터 통신에 “중국과 가까운 친구가 되기를 원한다”며 “그렇다고 미국과의 우호 관계를 약화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하며 외교 중심축의 변화를 부인함.

2016. 8. 31.

■ **케리, 인도와 ‘찰떡공조’ 과시…中남중국해 영유권 아욕 ‘경계’(연합뉴스)**

- 인도를 방문 중인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인도와 안보·대테러 문제에서 공조를 과시하면서도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을 인정하지 않은 헤이그 상설중재재판소(PCA)의 판결을 준수하라며 중국을 향해 목소리를 높임.
- 31일 인도 타임스오브인디아 인터넷판 등에 따르면 케리 장관은 이날 뉴델리 인도공과대학(IIT)에서의 강연에서 “미국은 남중국해 분쟁 당사국인 중국과 필리핀에 판결을 준수할 것을 요청한다”면서 “이번 판결은 규범에 입각해 국제질서를 유지하고 국제법 존중을 보여주며 지역적 안정과 번영을 지지하는 중요한 계기”라고 강조함.
- 그는 이어 영토 분쟁 해결을 위해 군사적 수단을 써서는 안 된다고 “법적 절차와 외교로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임.

■ **美전문가, 9월 미중 정상회담서 북한외제 주목 덜 받을 것(연합뉴스)**

- 미국 전문가가 다음 달로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에서 북한 관련 의제가 종전보다 주목을 덜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고 미국의소리(VOA)방송이 31일 보도함.
-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마이클 그린 선임부소장은 VOA와 인터뷰에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의 한국 배치에 대한 중국의 강한 반발과 미국의 우려,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오바마 대통령의 업적 중시 가능성 등으로 북한 의제가 주목을 덜 받을 수 있다”고 말함.
- 조지 W. 부시 행정부 1기에서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을 지낸 그린 선임부소장은 “제가 걱정하는 것은 오바마 대통령이 자신의 업적에 초점을 맞추지

않을까 하는 것”이라며 “북한 문제가 좋지 않으니까 뒤로 제쳐놓고 가급적 많이 언급하지 않을 수 있다”고 분석함.

나. 미·일 관계

2016. 8. 28.

■ 미일 외교장관, 北규탄 안보리성명 환영…한미일 연대 대응(연합뉴스)

-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이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를 비판하고 한국·미국·일본 3국의 연대 방침을 재확인했다고 교도통신이 28일 보도함.
- 보도에 따르면 케리 국무장관과 아프리카 케냐를 방문 중인 기시다 외무상과 전날 전화회담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한 것을 환영하며 이런 견해를 공유함.
- 약 30분간 이어진 회담에서 케리 국무장관은 미국이 일본을 포함한 동맹국 방위를 위해 “단호하게 나선다”는 뜻을 밝혔고, 기시다 외무상은 이번 미사일 발사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안전보장에 대한 위협이 더 심각해지고 있다”고 지적함.

2016. 8. 31.

■ 오바마-아베, 내달 아세안회의 때 3개월만에 또 회담…중견제(연합뉴스)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다음 달 초 라오스에서 회담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짐.
- 31일 요미우리(讀賣)신문과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다음 달 6~8일 라오스의 수도 비엔티안에서 열리는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관련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오바마 대통령과 회담하는 방향으로 조율 중이라고 일본 정부 관계자가 밝힘.
-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는 해양안전보장이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이며 오바마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이런 흐름을 반영해 중국의 해양 진출 정책에 대한 공동 대응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됨.

다. 미·러 관계

2016. 8. 27.

■ 미·러 “시리아 해결책 입장차 좁혀”…휴전까지는 아직(연합뉴스)

- 미국과 러시아가 시리아 사태 해결을 위해 26일(현지시간) 마라톤 협의를 벌였으나 바로 뚜렷한 성과를 내놓지는 못함.
- AP·AFP통신에 따르면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이날 스위스 제네바의 한 호텔에서 만나 장장 10시간에 걸쳐 협상을 벌였다. 하지만 이들은 시리아 휴전을 방해하는 기술적 문제들에 대한 입장차만 좁혔을 뿐 휴전이나 공동 군사작전 등 시리아 내전 해결책에 대한 합의에 이르는 데는 실패함.
- 각각 온건반군과 정부군을 지원하고 있는 미국과 러시아 주도의 합의만으로 시리아에 평화를 가져오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지만, 이번 외무장관 회담에서 휴전에 대한 구체적 합의가 나올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기대를 모은 바 있음.

2016. 8. 29.

■ 미-러 시리아 알레포 연합 공습작전 논의 중(연합뉴스)

- 러시아와 미국이 시리아 사태 해결 협상에서 인도주의적 재앙에 직면한 시리아 알레포에 대한 연합 공습작전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러시아의 지원을 받는 시리아 정부군의 공습작전으로 심각한 민간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됨.
- 미-러 협상에 정통한 제네바 소식통은 29일(현지시간) 인테르팍스 통신에 “양측이 9월 중순께부터 알레포의 무장 세력에 대해 조율된 공습을 가하는 가능성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힘.

라. 중·일 관계

2016. 8. 30.

■ 中日, G20 때 정상회담 조정 난항…센카쿠열도 갈등이 걸림돌(연합뉴스)

- 일본이 다음달 4~5일 중국 항저우(杭州)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기간 중일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지만 협의에 난항을 겪는 것으로 알려짐.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시진핑(習近平) 국가 주석과의 회담을 위해 지난 24일 자신의 외교 책사인 야치 쇼타로(谷内正太郎) 국가안전보장국장을 중국 베이징(北京)으로 급파함.
- 야치 국장은 지난 25일 양제츠(楊潔지<兼대신虎들어간簾>) 중국 국무위원,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를 잇따라 만나 아베 총리와 시진핑 주석과의 회담을 타진했지만 구체적인 성과를 얻지 못한 것으로 전해짐.

마. 중·러 관계

2016. 8. 30.

■ 러시아, 中·러 해군 합동훈련에 구축함 전단 파견(연합뉴스)

- 러시아가 다음 달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함께 실시하는 해군 합동훈련에 미사일 구축함 등으로 구성된 전단을 파견함.
- 러시아 이타르타스 통신은 내달 12일부터 19일까지 남중국해에서 실시할 ‘해상연합-2016’ 훈련에 태평양함대 소속 우달로이급 미사일 구축함 두 척, 대형 상륙함한 척, 예인선 한 척 등으로 구성된 전단이 참가한다고 30일 보도함.
- 통신은 태평양함대 공보장교를 인용해 이 전단이 다음 달 초 중국 남부 광둥성 잔장(湛江)으로 출항할 예정이라고 전함. 훈련 기간 양국 해군은 사전 조율작업에 따라 대(對)잠수함 훈련, 대공 및 대함 방어훈련 등 다양한 합동훈련을 할 계획임.

바. 일·러 관계

2016. 8. 31.

■ 日·러 경제협력박차...러 국영전력사에 3천700억원 첫 투자(연합뉴스)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내달 초 예정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러시아 국영전력회사 출자를 포함한 경제협력안을 제안할 예정이라고 니혼케이자이 신문(닛케이)이 31일 보도함.
- 이 방안에 따르면 일본 미쓰이물산은 국제협력은행(JBIC)과 함께 러시아 국영전력회사 ‘루스기드로’에 340억엔(3천700억원)을 투자, 이 회사의 자기주식 5%를 취득할 예정임.
- 정상회담은 아베 총리가 푸틴 대통령 초청으로 9월 2~3일 열리는 제2차 동방경제포럼에 참석하는 기간 이뤄질 예정임.

2016. 9. 1.

■ 日, 북방영토 반환시 ‘러시아인 거주권 인정’ 방안 마련(연합뉴스)

- 일본 정부가 러시아와 영유권 다툼이 있는 쿠릴 4개섬(일본명 북방영토) 문제의 해법으로 이들 섬이 일본으로 귀속돼도 현지에 사는 러시아인의 거주권을 인정하는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짐.
- 1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이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지난 5월 러시아 소치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만나 북방영토의 '새로운 접근 방법'을 도출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후속 조치임.

- 일본측은 1956년 소일(蘇日)공동선언에서 “평화조약 체결 후에 (4개섬 가운데) 시코탄도(色丹島), 하보마이(齒舞) 두 섬을 인도한다”고 합의한 만큼 평화조약 체결과 섬 반환이 협상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

III 북한인권

■ 개요

분류	일자	내용
북한인권 국제동향	8.27	美백악관, 北 미사일도발 인권침해 “깊은 우려”(연합뉴스)
	8.29	미 국무부, 북 인권증진 전략보고서 의회 제출(연합뉴스)
		북한이주민인권 의원연맹회의 총회 서울서 개막(연합뉴스)
	8.30	유엔 “북, 강제실종협약 비준해야”(자유아시아방송)
		유엔에 북한인권문제 전문가그룹 생긴다(연합뉴스)
		美 北 국외노동자 체류 20여개국 정밀관리...‘강제노동’ 정조준(연합뉴스)
		폴란드 조선소, 이달부터 北 노동자 고용 중단(연합뉴스)
		北인권 의원연맹 ‘인권침해 고발’ 선언문 채택(연합뉴스)
	9.1	美 北 김용진 처형에 “극도의 잔혹성 드러낸 또 다른 사례”(연합뉴스)
		유엔 서울인권사무소장 “평양 생존 확인 납북자 21명 유엔서 다뤄지게 노력”(미국의소리) 인권단체들, 북한 고위층 누구도 안전하지 않아...탈북 이어질 것(미국의소리)
북한인권 내부동향	8.31	中서 강제송환된 여성 급증...전거리교회소 여성수감시설 확장(연합뉴스)
		北 보위부, 국경 지역서 행방불명자 조사(연합뉴스)
북한인권 남한동향	8.29	주중 한국대사관 ‘북한 테러·납치 유인 가능성’ 재경고(연합뉴스)
	8.30	북한인권법 다음 달 4일 발효...시행령 국무회의 의결(연합뉴스)
		정부 당국자, 北 ‘내각상 처형설’에 “확인 필요한 사안”(연합뉴스)
	8.31	통일부, 北인권 체계적 조사...차후 책임규명 활동까지(연합뉴스)
9.2	北김정은 인권침해 국제법정에 넘기려면 ‘지시증거’ 모아야(연합뉴스)	
탈북자 이산가족 납북자 국군포로	9.1	[단독]러 극동 北무역대표부 탈북 외교관 자금 챙겨 한국 입국(연합뉴스)
대북지원	8.31	유엔의 북한 농업총조사 北 거부로 무산될 듯(연합뉴스)
		유엔개발계획 대북 지원 올해로 중단(자유아시아방송)
		아일랜드, 지난해 44만 달러 대북지원(자유아시아방송)
9.2	UNDP “대북사업 중단 계획 없어, 내년도 사업계획 작성 중”(미국의소리)	

■ 주간 동향

1. 북한인권 국제동향

2016. 8. 27.

■ 美백악관, 北 미사일도발·인권침해 “깊은 우려”(연합뉴스)

- 북한이 잠수함탄도미사일(SLBM) 발사를 감행하는 한편으로 마구잡이 숙청을 비롯한 인권탄압 행동을 이어가는데 대해 미국 백악관이 다시 “깊은 우려”를 표함.
-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26일(현지시간) 정례브리핑에서 미국과 국제사회가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며 “미사일 개발 계획에 관해 국제 규정을 따르려는 북한의 의지와 더불어, 국제사회에서 제기되는 중대한 인권 우려에 개선하려는 북한의 입장 표명을 원한다”고 말함.
- 미국 비정부기구 북한인권위원회(HRNK)의 지난 15일 보고서를 보면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집권 이후 북한에서는 고위층 숙청이나 탈북 시도자에 대한 탄압이 함께 강화됨.

2016. 8. 29.

■ 미 국무부, 북 인권증진 전략보고서 의회 제출(연합뉴스)

- 미국 국무부의 카티나 애덤스 동아시아태평양담당 대변인은 29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국무부가 지난주 의회에 북한 내 인권증진 전략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힘.
- 애덤스 대변인은 이 보고서가 북한 내 인권 증진을 위한 세 가지 전략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고 소개함. 첫째, 북한 내 인권유린 실태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각심을 높이고 둘째는 북한 내로 정보 유입을 확장하고, 마지막으로 북한 내 인권 유린 가해자에 대한 책임 추궁을 적극 추구한다는 것임.
- 이번 보고서는 지난 2월 제정된 대북제재강화법(H.R.757)에 따라 제출된 것임.

■ 북한이주민인권 의원연맹회의 총회 서울서 개막(연합뉴스)

- 올해로 13회째를 맞는 북한자유이주민 인권을 위한 국제의원연맹회의(IPCNKR) 총회가 29일 오후 서울 신라호텔에서 사흘 일정으로 개막함.
- 총회에는 상임 공동의장인 새누리당 홍일표·일본 자민당 나카가와 마사하루(中川雅治) 의원을 비롯해 마르셀 니야트 지펜지 카메룬 국회의장, 에카 베셀리아 조지아 의회 인권위원장, 주한 외교관, 인권단체 대표 등 10개국 80여 명이 참석할 예정임.
- 우리나라 의원은 새누리당 소속 심재철·국민의당 소속 박주선 국회 부의장과 새누리

- 당 정병국 김재경 이해훈 홍일표 황영철 경대수 이완영 오신환 정양석 하태경 김성원 김성태 박찬우 백승주 송희경 정유섭, 국민의당 이상돈 송기석 의원 등이 포함됨.
- 연맹은 총회 이틀째인 30일 난민 증가에 따른 국제사회의 변화와 탈북 난민의 인권, 탈북 난민 문제와 사회통합, 북한 정권의 외국인 납치 문제 등을 논의하고, 심각한 북한 인권 실상을 고발하고 탈북 난민 보호책 강화 등을 촉구하는 내용의 공동선언문을 채택할 예정이다.

2016. 8. 30.

■ 유엔 “북, 강제실종협약 비준해야”(자유아시아방송)

- 유엔 인권사무소는 30일 세계 강제실종 희생자의 날을 맞아, 북한이 다른 국가들과 같이 국제 사회 일원으로서의 유엔 강제실종협약에 비준해야 한다고 말함.
-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협약은 유엔인권이사회가 2006년에 채택한 국제협약으로, 강제실종과 관련한 가장 중요한 법적 효력을 가졌고 감시와 보호를 전반적으로 명시하고 있음.
- 유엔 산하 강제실종실무그룹은 현재 납북자 문제의 해결을 위해 북한에 그 해당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과 납북자 행방을 알려 주기를 요구하는 통지를 보냈고, 북한에 대한 국가 방문을 요청해 놓은 상태라고 설명함. 그러나 현재까지 북한은 강제실종실무그룹이 불순한 정치적 의도로 납북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
- 한편, 유엔은 북한으로 납치돼 강제실종된 사람의 수는 어린이를 포함해 2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음.

■ 유엔에 북한인권문제 전문가그룹 생긴다(연합뉴스)

- 시나 폴슨 유엔 북한인권사무소장이 조만간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독립 전문가단(Group of Independent Experts)을 출범시킬 계획을 밝혔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30일 보도함.
- 폴슨 소장은 이날 RFA와 인터뷰에서 “독립 전문가단은 2명의 전문가로 구성되며 토마스 오헤아 키타나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을 보좌하게 된다”면서 “이들은 북한 당국의 반인도 범죄 책임자, 책임 규명 및 처벌 등에 대한 방안을 연구할 예정”이라고 말함.
- 독립 전문가단은 내년 3월 열릴 유엔 인권이사회에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폴슨 소장은 전함.

■ **美, 北 국외노동자 체류 20여개국 정밀관리...‘강제노동’ 정조준(연합뉴스)**

- 미국 정부가 지난달 초 북한의 인권유린 실태를 종합적으로 담은 인권보고서를 발표한 데 이어 이번에는 북한 국외노동자의 ‘강제노동’을 정조준하고 나섬.
- 29일(현지시간) 미 국무부와 의회 등에 따르면 국무부는 지난 주말 대북인권제재의 후속 조치 중 하나로 ‘북한 인권증진전략보고서’를 미 상하원 외교위원회에 공식 제출함.
- 미 국무부는 앞서 지난달 6일 미 의회에 북한의 인권유린 실태를 나열한 인권보고서를 제출했으며, 재무부는 이를 근거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비롯한 개인 15명과 기관 8곳에 대한 제재명단을 발표한 상태임.

■ **폴란드 조선소, 이달부터 北 노동자 고용 중단(연합뉴스)**

- 폴란드의 한 조선소가 이달부터 북한 노동자를 고용하지 않고 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30일 노르웨이 언론을 인용해 보도함.
- 노르웨이의 기술산업 관련 주간지 ‘테크니스크 우게블라드’는 폴란드 북부 그디니아의 크리스트(Crist) 조선소가 북한 노동자를 더는 고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함.
- 문제가 커지자 크리스트 조선소는 10여 년간 북한 노동자들을 파견해온 인력중개업체인 아르맥스와 계약을 해지하기로 결정함. 아르맥스는 북한의 능라도무역총회사와 계약을 맺고 북한 노동자 인력을 알선해 왔음.

■ **北인권 의원연맹, ‘인권침해 고발’ 선언문 채택(연합뉴스)**

- 북한자유이주민 인권을 위한 국제의원연맹회의(IPCNKR) 총회는 30일 북한에서 진행되는 인권침해 실태를 고발하고 국제 공조를 강화한다는 공동선언문을 채택함.
- 총회는 상임 공동의장인 새누리당 홍일표, 일본 자민당 나카가와 마사하루(中川雅治) 의원을 비롯해 마르셀 니아트 지펜지 카메룬 국회의장, 에카 베셀리아 조지아 의회 인권위원장, 주한 외교관, 인권단체 대표 등 10개국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9~31일 일정으로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림.
- 이들은 선언문에서 “북한 정권의 자국민에 대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에 대한 심각한 수준의 권리 침해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면서 “인간 본연의 자유로운 삶에 대한 열망과 가치를 무력으로 억누르고 통제하는 북한 정부가 주민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존중,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함.

■ **정부 당국자, 北 ‘내각상 처형설’에 “확인 필요한 사안”(연합뉴스)**

-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교육정책과 농업을 각각 담당해온 내각상(장관) 2명을 ‘불경과 반혁명’ 등의 죄목으로 공개 처형했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정부 당국자는 30일 ‘확인된 바 없다’거나 ‘확인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밝힘.
-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에서 장관급 인사의 처형은 이례적인 사안으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만약 실제로 처형당한 것이라면 정권 차원의 주요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고 분석함.
- 일각에서는 처형당한 인물이 장관급 인사가 아니라 농업성과 교육성의 간부급 인사라는 관측도 나옴. 한 대북 소식통은 “북한 교육성과 농업성의 간부 2명이 비리 혐의로 처형됐다는 얘기를 평양의 소식통으로부터 들었다”면서 “이들 2명은 서로 친구 사이라는 소문이 있다”고 전함.

2016. 8. 31.

■ **美, 北 국외노동자 강제노동 걸어 인권압박·핵-미사일 돈줄차단(연합뉴스)**

-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가 임기 말인데도, 핵과 미사일 도발을 일삼는 북한에 대한 압박의 고삐를 바짝 죄고 있음.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등 국제사회를 통한 직접적인 대북 제재와는 별개로 미 정부 차원의 독자 제재, 그리고 인권압박을 통해 다각도의 조치를 속속 취하고 있음.
- 미 국무부 애나 리치 앨런 대변인은 언론 인터뷰에서 “(북한의 인권유린에 대한) 국제적 인식을 높이고, 대북정보 유입을 늘리며, 인권유린 가해자에 대한 책임을 추궁한다는 3개 전략 목표를 이번 보고서에 담았다”고 말함.

■ **유엔, 北 주민 2명 자의적 구금 피해자로 판정해 석방 촉구(연합뉴스)**

- 유엔이 지난해 북한 주민 2명을 북한 당국에 의한 자의적 구금 피해자로 판정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31일 보도함.
- 방송은 유엔 인권이사회 산하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이 지난해 9월 개최된 회의에서 북한 주민 김성혁 씨와 권향실 씨를 자의적 구금의 피해자로 판정했다며 “두 사람은 실무그룹이 지난해 자의적 구금 피해자로 판정한 전 세계 31개국 56명에 포함됐다”고 밝힘.
- 실무그룹은 피해자 가족이나 인권단체들의 청원을 받아 국제 인권규범에 맞지 않는 구금 사례를 조사하고 필요한 권고를 제시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2014년에는 강제복송된 탈북자 등 18명을 북한 당국의 자의적 구금의 피해자로 판정한 바 있음.

■ 폴란드 인력공급업체 직원 대다수 북한인(자유아시아방송)

- 폴란드노동감독관리청(Polish Labor Inspectorate) 자료에 따르면 폴란드 북부 그디니아의 크리스트조선소(Crist Shipyard)에 노동자를 공급해 온 폴란드 인력공급회사 아르멕스(Armex) 직원44명 중 39명이 북한 사람인 것으로 드러남.
- 노르웨이의 기술산업 관련 주간 잡지 ‘테크니스크 우게블라드(Teknisk Ukeblad)’의 라스 타랄슨(Lars Taraldsen) 기사는 지난 31일 자유아시아방송에 임금착취, 국제노동기준에 미달하는 안전기준 등으로 문제가 된 크리스트조선소가 최근 알선 계약을 파기한 아르멕스는 무너만 폴란드 회사라고 지적함.
- 타랄슨 기사는 그러나 아르멕스가 실제로 북한 노동자 공급을 완전히 중단했는지 여부는 확실치 않다고 지적함.
- 코발스카 씨는 2006년에도 인력공급업체 ‘셀리나(Selena)’사의 대표로 그디니아 인근 그단스크의 조선소에 노동자를 공급하다 착취 논란이 일자 이 회사를 정리하고 ‘알슨(Alson)’이라는 회사를 설립함. 한국의 인권단체 북한인권정보센터는 최근 북한 해외파견 노동자 관련 보고서에서 알슨사는 북한군 려단장 출신 고철용이라는 사람이 대표로 있는 원예(Wonye)라는 회사로 이름이 바뀌었다고 밝힘.

2016. 9. 1.

■ 美, 北 김용진 처형에 “극도의 잔혹성 드러낸 또 다른 사례”(연합뉴스)

- 미국 정부는 31일(현지시간) 북한의 김용진 내각 부총리가 지난달 처형된 것과 관련, “사실로 확인된다면 이는 북한 정권이 갖고 있는 극도의 잔혹성을 드러낸 또 다른 사례”라고 비판함.
- 미 국무부의 카티나 애덤스 동아태 담당 대변인은 이날 연합뉴스에 “북한 관리 처형에 관한 언론 보도를 봤다”면서 이같이 밝힘.
-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63세인 김용진은 6·29 최고인민회의 단상 밑에 앉아있었는데 자세 불량을 지적받은 것이 발단이 됐다고 한다”면서 “보위부 조사를 받았는데 그 결과 반당 반혁명분자 그리고 현대판 종파 분자로 낙인찍혀 7월 중에 총살 집행됐다”고 설명함.

■ 유엔 서울인권사무소장 “평양 생존 확인 납북자 21명, 유엔서 다뤄지게 노력”(미국의소리)

- 한국 내 민간단체인 납북자가족모임 최성용 대표는 지난 2011년 210만 명 규모의 평양시민 명부를 입수한 뒤 자신이 갖고 있는 510여 명의 전후 납북자 명단과 대조작

- 업을 벌여 이 가운데 21명이 평양에 생존해 있음이 밝혀졌다고 주장함.
- 최 대표가 생존하고 있다고 주장한 납북자 21명 가운데는 납북 어부 10명과 대한항공 KAL기 승무원 3명, 고교생 4명 등이 포함됐고 이들은 대부분 당 연락소와 같은 대남기관에 근무해 온 것으로 알려짐. 최 대표는 자신이 공개한 이 기록에 대해 한국 정부가 진본임을 확인했다며 증거가 분명한 사안인 만큼 이 문제에 대해 유엔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함.
 - 이에 대해 간담회에 참석한 시나 폴슨 유엔 북한인권 서울사무소장은 새로운 정보를 바탕으로 유엔에서 이 문제가 다뤄질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힘. 폴슨 소장은 유엔 산하 '강제적 비자발적 실종에 관한 실무그룹'(WEGID)에 관련 정보를 제출하게 되면 북한 정권에 납북자들의 생사 여부 등을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며 이 같은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말함.
 - 그러나 납북자 문제는 수 십 년 동안 끌어온 어려운 문제라며 북한으로부터 즉각적이고 긍정적인 답변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며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 인권단체들, 북한 고위층 누구도 안전하지 않아... 탈북 이어질 것(미국의소리)

- 워싱턴의 대북인권단체인 북한자유연합의 수전 솔티 대표는 31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이 김용진 내각 부총리를 처형한 것은 정권 내부의 불안정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징후라고 말함.
- 솔티 대표는 김용진 부총리 처형이 북한 고위 당국자들을 공포로 몰아 넣어, 더 많은 고위급 인사의 탈북으로 이어지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내다봄.
- 워싱턴에 본부를 둔 북한인권위원회의 그레그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북한이 워낙 폐쇄적인 사회이기 때문에 김용진 부총리 처형 소식에 대해 100% 확신할 수 없다고 말함. 그러나 북한이 지난 2009년 이후 고위급 인사의 처형 등 공세적인 숙청을 계속하고 있는 만큼, 김 부총리의 처형이 사실로 확인된다고 해도 결코 놀랄 일은 아니라고 말함.
- 국제 인권단체인 휴먼 라이즈 워치의 존 시프턴 아시아 국장도 북한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정확히 알기는 매우 어렵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임.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북한의 통제 방식과 법질서가 국제규범에 전혀 부합하지 못한다는 점이라고, 시프턴 국장은 말함.
- 영국 런던에 본부를 둔 국제 인권단체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의 오마르 와라이치 국장은 김 부총리 처형과 관련해,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은 모든 종류의 사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힘.

- 영국의 대북인권단체인 유립북한인권협회의 박지현 간사는 북한이 과거 봉건시대로 퇴행하고 있다고 비판함.

2. 북한인권 내부동향

2016. 8. 31.

■ **중서 강제송환된 여성 급증·전거리교화소 여성수감시설 확장(연합뉴스)**

- 중국에서 강제 송환되는 여성들이 급증하면서 북한이 여성수감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미국의 비정부기구 북한인권위원회(HRNK)는 30일 공개한 '전거리교화소(12번 교화소) 실태 보고서'에 이같이 밝힘.
- HRNK는 상업위성 사진 분석업체 '올소스어널리시스'와 공동으로 1960년대부터 지난해 5월까지의 인공위성 사진 분석 결과와 탈북자들의 증언 등을 토대로 전거리 교화소의 변화상을 관찰함. 이 보고서에 따르면 북중 국경지대인 함경북도 회령시에 위치한 '전거리교화소'의 수감자는 1990년대 1천300명에서 현재 약 5천 명으로 늘어나 포화상태를 보이고 있음. 특히 이 교화소 수감자의 20%는 여성이며, 이 중 80%는 중국에서 강제송환된 사람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 그렉 스칼라튜 HRNK 사무총장은 보고서에서 "탈북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북한은 여성수감자가 늘어나면서 2009년 2~8월 본 시설 인근에 별도의 부속건물(여성수감시설)을 건설했으며, 이번 위성사진 분석을 통해 그것이 사실로 확인됐다"고 말함.

■ **北 보위부, 국경 지역서 행방불명자 조사(연합뉴스)**

- 북한 국가안전보위부가 지난 20일부터 국경 지역에서 행방불명자에 대한 재조사를 시작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31일 보도함.
- RFA는 일본 매체 아시아프레스를 인용해 "보위지도원과 보안원, 인민반장으로 구성된 조사단이 직접 행방불명자 가족의 집을 방문하거나 보위부로 호출하는 형식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행방불명자가 과거에 밀수한 적이 있는지, 화교와 접촉한 적이 있었는지, 밀수를 통해 돈을 받은 기록이 있는지 등을 들추고 있다"고 전함.
- 이번 조사는 최근 북한 고위급 인사의 탈북이 잇따르는 상황에서 행방불명자의 상황을 명확히 하고, 탈북자 가족의 추가 탈북 가능성을 막기 위해 감시체계 강화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RFA는 해석함.

3. 북한인권 남한동향

2016. 8. 29.

■ 주중 한국대사관 ‘북한 테러·납치 유인 가능성’ 재경고(연합뉴스)

- 주중 한국대사관이 최근 북한 고위급 외교관 망명 사태 등으로 대북 테러 위협이 커지자 한국인들에게 신변안전 강화를 긴급 재공지한 것으로 확인됨.
- 이는 불과 한 달 만에 또다시 나온 신변안전 조치라는 점에서 중국 지역 교민 또는 여행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됨.
- 북한은 최근 중국과 동남아 지역에 직접 공작원을 파견하거나 현지 마피아 또는 폭력 조직과 연계해 한국인을 대상으로 테러 또는 유인 납치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었는데 태영호 공사 망명 이후 이런 징후가 다시 곳곳에서 포착된다는 게 최근 대북 소식통들의 전언임.

2016. 8. 30.

■ 북한인권법 다음 달 4일 발효...시행령 국무회의 의결(연합뉴스)

- 지난 3월 북한인권법이 11년만에 국회에서 통과된 데 이어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다음 달 4일 법이 본격 시행됨.
- 정부는 30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북한인권법 시행령안을 심의·의결함. 이번 시행령은 통일부 직속 ‘북한인권기록센터’의 북한인권기록 수집 방법 및 자료 이관 절차를 구체화하고, 법무부에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함.
-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 인권 실태에 대한 체계적 조사를 통해 북한의 반인도적 범죄 사실을 조사·기록함으로써 인권 보호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북한 당국의 태도 변화와 정책 전환 적극적으로 유도해 나갈 생각”이라고 밝힘.

2016. 8. 31.

■ 통일부, 北인권 체계적 조사·차후 책임규명 활동까지(연합뉴스)

- 통일부는 다음 달 4일 북한인권법 시행을 계기로 북한 인권 문제를 체계적으로 기록할 수 있게 됐고, 이를 토대로 책임규명 활동까지 할 수 있게 됐다고 31일 밝힘.
-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인권법 시행의 의미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북한인권법은 그동안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각 시민단체와 각자가 따로따로 하던 행위들

을 법 테두리 내에서 체계적으로 정리해 진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고 말함.

- 정 대변인은 “일단 ‘북한인권기록센터’를 통해서 북한 인권에 대한 여러 가지 기록들을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모아둘 수 있다”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차후에 책임규명 활동까지도 나설 수가 있다”고 설명함. “다음으로 ‘북한인권재단’을 통해서 북한 인권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그런 점에서 기존에 없던 시스템이 마련됐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임.

2016. 9. 2.

■ **北김정은 인권침해 국제법정에 넘기려면 ‘지시증거’ 모아야(연합뉴스)**

-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인권 유린 행위를 국제법정에서 단죄하려면 그의 지시 및 인지를 입증할 수 있는 북한 내부 자료를 추적해야 한다고 전직 국제형사재판관이 지적함.
- 유엔 구(舊) 유고 국제형사재판소(ICTY) 재판관을 지낸 권오곤(63) 김앤장 국제법연구소 소장은 2일 서울 서초동 국립외교원에서 '예비 외교관'들을 상대로 한 강연에서 이같이 밝힘.
- 권 재판관은 ICTY 재판관으로 있는 동안 옛 유고연방의 보스니아 내전 당시 대량학살을 자행한 1급 전범이자 정치지도자인 라도반 카라지치(징역 40년 선고)를 단죄한 바 있음.

4. 탈북자 및 이산가족·납북자·국군포로

2016. 9. 1.

■ **(단독)러 극동 北무역대표부 탈북 외교관 자금 챙겨 한국 입국(연합뉴스)**

- 러시아 극동 블라디보스토크에 있는 북한 무역대표부에서 근무하다 지난 7월 탈북한 북한 외교관이 상당한 규모의 대표부 보유 자금을 챙겨 도주한 뒤 한국으로 들어간 것으로 알려짐.
- 블라디보스토크 북한 무역대표부 소속 외교관이 탈북한 소식은 지난달 말 전해졌으나 상세한 상황과 최종 행선지는 확인되지 않았음.
- 러시아 현지 소식통은 1일(현지시간) “블라디보스토크 북한 총영사관에 들어가 있는 무역대표부 소속 외교관이 탈북한 뒤 제3국을 거쳐 한국으로 간 것으로 안다”고 밝힘.

5. 대북지원

2016. 8. 31.

■ **유엔의 북한 농업총조사 北 거부로 무산될 듯(연합뉴스)**

- 유엔이 북한에서 사상 처음 실시하려던 ‘농업총조사’가 북한 측의 거부로 무산될 전망이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31일 보도함.
- 유엔 식량농업기구(FAO) 통계국의 자이로 카스타노 농업총조사 담당관은 30일 VOA에
“북한이 다음 달 태국 수도 방콕에서 열리는 ‘농업총조사 2020’ 설명회 참석을 거절했다”고
밝힘.
- 지난 1970년 이후 전 세계 182개 국가들이 한 차례 이상 농업총조사를 실시했으나 북한은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농업총조사를 하지 않았음.

■ 유엔개발계획 대북 지원 올해로 중단(자유아시아방송)

- 유엔개발계획의 대북 지원 활동이 올해 12월 31일부로 중단됨. 이는 내달 6일~9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리는 ‘유엔개발계획, 유엔인구기금, 유엔프로젝트서비스국 운영이사회’의
2016년 후반기 정기이사회 심의 안건에 유엔개발계획의 대북 지원 활동이 포함돼 있지
않은 데에서 확인됨.
- 현재 진행중인 유엔개발계획의 ‘북한국가프로그램’은 이미 작년 말 종결된 2011~2015년
주기의 프로그램이 1년 연장된 것으로, 재 연장 및 새로운 운영 주기를 신청하려면 운영이사
회의 승인이 필요함. 그러나 유엔개발계획은 운영이사회에 곧 종료될 ‘북한국가프로그램’에
대한 연장 및 새 주기 승인을 요청하지 않았음.
- 지난 6월 뉴욕 유엔본부에서 유엔아동기금(UNICEF)의 2016-2017년 활동 계획 및 예산을
심의하는 회의에서 유엔 내부감사조사국(OIA)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인해 유엔아동기
금 평양사무소가 지원 활동에 필요한 현금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고 발표함. 유엔의 대북
제재가 인도적 지원과는 별도로 하고 있지만 상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줌.

■ 아일랜드, 지난해 44만 달러 대북지원(자유아시아방송)

- 지난해 아일랜드 정부가 집행한 북한 주민을 위한 인도주의 지원금 규모가 약 44만 달러로
확인됨.
- 아일랜드국제개발청이 지난 27일 공개한 2015 연례보고서를 보면, 아일랜드 정부의 대북
인도주의 지원금은 약 40만 유로, 미화로 약 44만 달러임.
- 아일랜드 국제개발청 대변인은 향후 대북지원의 시기와 규모 등 추가 지원과 관련한 계획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서 북한에서 식량 구호활동을 하는 국제기구들과 협의를 거쳐 지원
규모를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임.

2016. 9. 2.

■ UNDP “대북사업 중단 계획 없어, 내년도 사업계획 작성 중”(미국의소리)

- 유엔개발계획 UNDP 대변인실은 1일 ‘VOA’에 현재 2017년과 그 이후 ‘대북사업 계획서 초안’을 작성하고 있다고 밝힘. 현재 북한에서 진행 중인 유엔개발계획 사업은 지난해 말 종료된 ‘2011~2015년 대북 사업’이 1년 연장된 것으로, 재연장이나 새로운 사업 운영을 위해서는 유엔 집행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함.
- 유엔개발계획은 북한사무소 등 관계자들과 논의를 거쳐 내년 1월 예정된 유엔 집행이사회 상반기 정기회의에 최종 계획서 초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힘.
- 그러면서 이 같은 과정이 종전과 비교해 별로 특이한 것이 아니며, 대북사업을 운영하는 데 어떠한 문제도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함. 이는 유엔개발계획의 대북사업이 올해 말로 중단될 것이라는 일부 언론보도를 부인하는 것임.